3. 정보 · 통신

3.1 현황 및 문제점

▮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속도와 변화 등 장기적 예측의 어려움

○ 기술진보의 속도와 폭이 넓어 사전에 변화 양상의 예측 및 대응의 어려움

○ 그로 인한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 규범 및 가치관의 혼란 야기

▮기술진보에 수반한 공공의 대비 부족

○ 행정기관의 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홍보 부족

○ 기업체의 정보 · 통신 전략 및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토로

▮정보격차 문제 증대

○ 고령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 접근 제한 및 제반 교육의 부재

○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의 증대와 불균형 문제 증대

▮정보화 역기능 증대

○ 정보통신의 발달은 컴퓨터, 스마트폰 등의 보급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음

-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 및 파괴,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

○ 공공과 민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DDos와 악성 해킹(Hacking) 공격 급증

- 사회 정보망과 지자체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가 사이버테러에 훼손될 우려

3.2 여건변화

▮정보화에 의한 생활환경 변화

○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재택근무, Smart Work, 사이버 공간상에 각종 업무의 실현 및 여가문화 · 복지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

○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은 스마트폰, TV, 컴퓨터 등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개별적인 기기들을 연결, 통합 사용이 증대

▌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증대

○ 도시계획, 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이 증대

- NGIS(국가지리정보시스템), UPIS(도시계획정보시스템), ITS(지능형첨단교통체계), LBS(위치기반정보시스템) 등을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 선도

○ '정부3.0' 정책의 실현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실현

▌정보기술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증대

○ U-city, g-CRM, IT 등의 기술수출 증대

○ 기업경쟁의 심화 및 산업 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 증대
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

○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전반에 걸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정보제공 및 통합관리 증대

3.3 계획방향

▌미래 정보 · 통신 기술의 개발과 변화를 선도

○ 정보 · 통신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 환경 변화를 선도

○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시민 참여형 맞춤 정보 시스템 개발로 도시행정 및 시민과의 교류 활성화 주도

▌공공의 대처 능력 강화

○ 공공주도에 의한 정보관리 원칙 확립

○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

○ 인터넷 에티켓 교육과 정보윤리 특강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실시

▌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능동적 대처

○ 사이버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마비와 대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구축

○ PC 및 서버 통합보안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

▌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강화

○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

○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, 저소득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, 소상공인 무료 홈페이지 제작 등의 사업 실시

3.4 세부전략 및 시책

가.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

▮정보개방에 따른 역기능 치료 및 예방

○ 사이버테러 등 범죄 발생시 즉각 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

- 보안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
- 정부, 기업, 언론, 사용자,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

○ 인터넷 중독 상담소 설립 및 정보윤리 특강 등 실시

- 청소년 등의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소 및 정보윤리 강연회 실시
-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재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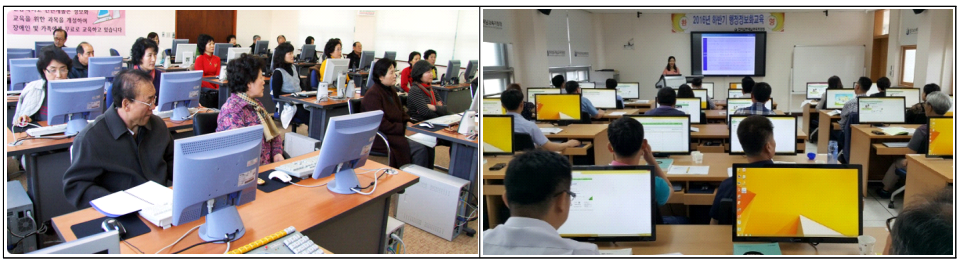
○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

- 사이버침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소속기관 망(인터넷망, 업무용망) 분리 지속 추진
- 예방·대응·사후관리까지의 정보보호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
-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

▮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

○ 정보인프라 구축 확대

- 디지털 기회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



(그림III- 26) 정보화 교육사업 예시

-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(BcN) 확대 구축
-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

○ 통신망 교체 및 정보센터 운영

- LAN 확장 및 통신망 교체
- 유 · 무선 인터넷 접속확대
- 행정전산망 확대

○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

-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(새올, 지방재정 등)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단계적 전환

나. 공공정부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

▌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 제공

○ 문화, 지역경제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

- 시민에게 필요한 지역정보 및 문화, 관광, 보건 등 다양한 정보 제공
-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시정참여 증대

○ 민간/공공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

- 대(對) 시민 정보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
- 부서별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, 광양시 포털사이트 지속적 보완, 무인민원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 무인단말기 설치 확대

▌행정업무의 정보화

○ 'All Digital 제로스탑' 정부서비스 완성

- 민원 처리 전과정에 종이없는 All Digital 민원행정서비스 구현

○ 정보공개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

- 민간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·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개발·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(그림Ⅲ- 27)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분야

- 민간 데이터와 내부 행정 데이이터를 융·복합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학행정 구현

○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

-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의 지속적 구축
-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

○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

-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
-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
- 도시계획/주택/건축/세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

○ 시공간 제약없는 O2O 행정 실현

- 정부의 온·오프라인 채널과 민간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민·관 협업형 O2O 행정서비스 발굴 및 확산
- 모바일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현장행정 업무 환경 제공

다. 사업정보화 기반 조성

▮신산업 창업 및 사업 촉진지원체계 마련

○ 정보제공사업과 정보유통사업 육성

- 정보제공사업(IP)과 정보유통사업(ISO) 육성
- 기술의 최신동향 정보 제공과 기술 적용시의 문제점 정보 공유

○ 유망 정보통신산업 지원체계 마련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

- S/W산업, 문화산업, 벤처기업 창업지원, 선정기업 관리체계 지원
-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기술의 체계적인 지원

○ 과학적 사회안전망 구축

-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을 위한 CCTV 고도화를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
-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종합 안전망 구축

(그림III- 28)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개요

▮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

○ 산 · 학 · 연 공동의 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

- 산 · 학 · 연 공동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센터 및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
- 인프라 · 기술 · 서비스의 확산과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

○ 지역대학을 활용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

- 지역대학 활용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교육기관 설립으로 시민 정보교육서비스 제공